

기업 성장·K-증시 지원 절실… 글로벌 위기 극복 한목소리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경제·금융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통해 'K-제조업' 재건의 성장엔진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경협은 3일 새 정부에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극복의 핵심은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도 언급했다. 한경협은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첨단 산업 육성과 난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새 정부에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정책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인공지능(AI) 혁명 등 국제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치러졌으며, 사회 전환기적 과제 해결과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부터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새 정부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



한국경제인협회.



여의도 증권가.

/손진영 기자 son@

한경협 “K-제조업 성장엔진 구축”
경총 “규제 개선·유연한 노동시장”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견련 “국익 중심 외교로 내수 회복”

조했다.

또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 국가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0%대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통해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새 정부는 대기업,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특히,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

조중소기업에 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또 “804만 중소기업도 새 정부와 협력해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우리 경제가 ‘성장엔진을 재점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내놓은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악화될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무너진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중견련은 논평에서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우리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선 최선의 방편으로서 국부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빠르게 제고함으로써 첨단과 전통 산업을 아우르는 강건한 혁신의 거점을 구축해야한다”면서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시장 역동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 구체적인 실천 시너지를 도출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해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분야는 물론, K-콘텐츠와 서비스·유통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총체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금지와 처벌의 고질적 인식을 벗어나 도전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선진국형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투협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필요”
증권사 “선진국형 투자문화 기대”
자산운용 “사모펀드 규제 정상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해 증권가는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 자본 시장은 혁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의 재산 증식 및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자본시장의 쿼터 점프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 정책총괄기구를 신설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 정책의 일사불란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

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부동산시장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국민이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등 발전적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1400만명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일관된 정책을 통해 한국증시를 부양시키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 금융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 가상자산, 대체투자, 해외투자은행(IB) 등 우리나라 금융사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해 과감한 규제 타파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사모펀드 등 규제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운용사 진입장벽과 투자자 요건 등은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위축시켰다. 정상적인 사모 운용사까지 옥죄는 규제를 재조정해 벤처와 중소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 임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구축,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통해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호·허정윤·원관희·이혜민 기자

bada@metroseoul.co.kr

“국민 통합하고 경제안정 도모해야… 교육정책 일관성 필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시민·교육·의료

시민단체 “과도한 대통령 권한 조정”
종교계 “통합·공존 시대 열어야”

교육계 “공약보다 법적절차 우선”
의료단체 “의대생·전공의 복귀 최우선”
시민 “부동산 규제, 정상거래 막아”

계엄과 탄핵소추, 파면, 선거에 이르는 과정은 사회의 정당한 복구 작업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론 분열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지난 반년 국민들은 양대 진영의 첨예한 대립을 목도했다. 또 국민 상당수가 이 대결 구도의 당사자·후원자로 참여했다. 4일 집권하는 세력의 임무가 막중하다.

지난 2일 TV 채널에서 한 평론가는 전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면 집무실 책상에 전임자의 편지가 놓여 있다는 것. 편지에는 ‘당신은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한테도

대통령입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은 반목으로 인한 사회 균열을 우선적으로 봉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국내 시민사회, 종교단체는 정치·사회 개혁을 비롯해 국민갈등 해소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낸 성명에서 “이번 선거가 국민을 위한 개혁 정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남용의 통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통제 등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통제할 장치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혐오 정치의 배격과 민주주의 회복,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개혁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을 약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

국천주교주교회의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모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욱 귀 기울이며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범불교시국회의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양분된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 상태를 치유하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주의의 가치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과 갈등, 경제적 불안,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고장나 있다. 이에 민생경제는 물론 교육, 의료, 부동산 등의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드높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요동치며 교원과 국민 모두가 그에 적응하느라 막대한 재정과 에

너지를 소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반복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 큰 장애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공약보다 법적 절차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대입제나 특목고 문제를 확정 발표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위법 소지가 크다”라며 “정권 입맛에 맞게 국교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공약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초법적 사고이며 국민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단체는 새 대통령에게 휴학·사직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고령

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도 언급하며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지속 가능한 정책 논의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이지만 재정 한계와 의료인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구조적 불균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하남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경원 씨는 시대착오적 규제의 철폐를 주문했다. 박 씨는 “집값이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 때의 규제가 불황인 지금까지 이어져 정상 거래를 막고 있다”며 “주거용도로 쓰는 소형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및 보증보험가입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청년 및 취약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연세·이현진 기자 kys@